

‘06년 비정규직 통계 조사 결과 분석 보고

◇ 선택 동기(자발적·비자발적)에 따른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·분석하고 그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

< 요약 >

-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**35.5%(5,457천명)**로 작년 동기 대비 **26천명 감소** (’01년 이래 비정규직 첫 감소)
 - 고용구조의 개선보다는 경기적 요인이 주로 작용
 - 기간제가 감소하고 공공 및 사회서비스업종 중심의 시간제·용역 증가
- 비정규직 중 자발적 선택은 **51.5%**, 비자발적 선택은 **48.5%**
 -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4%, 자발적 비정규직의 62% 수준,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및 자발적 비정규직자의 1/3
 -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40대(27.9%), 고졸이하(86%), 단순노무·기능직(58.4%), 건설·도소매음식숙박업(46.2%), 30인 미만 사업장(81.2%) 등 취약계층이 다수
- 비정규직 선택동기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선택과 집중
 -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여건 조성: 비정규직 보호입법, 비정규직 종합대책,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의 가시적 성과 거양(차별해소)
 - 비자발·비정규직 합정 탈출 지원: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, 근로감독행정 혁신, 최저임금 현실화 등 추진

1. ’06년 비정규직 일반 동향

- 금년도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**5,457천명**, 임금근로자의 **35.5%**로 작년 동기 대비 **26천명 감소**(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」, ’06년 8월)
 - ’01년 조사개시 이래 처음으로 비정규직 규모 감소(비정규직 비중도 2년 연속 감소)

<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추이 >

(단위: 천명, %)

| 년도 | ’01. 8월 | ’02. 8월 | ’03. 8월 | ’04. 8월 | ’05. 8월 | ’06. 8월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비정규직 | 3,635 (26.8) | 3,839 (27.4) | 4,606 (32.6) | 5,394 (37.0) | 5,483 (36.6) | 5,457 (35.5) |

* ()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

- 증가하던 기간제(△6천명)와 일일근로(△51천명) 등 감소, 파견근로(13천명), 용역근로(68천명), 시간제 근로자(91천명) 등은 크게 증가

- 서면근로계약 체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간제가 줄고 공공행정 및 사업지원서비스(인력공급, 경비, 청소 등) 중심의 시간제, 용역 등 증가
- o 임금, 근로복지 수혜율 등에서 정규직과의 격차 지속(별첨 1 참조)

2. 선택 동기에 따른 비정규직 특성

□ 선택 동기

- o 전체 비정규직 중 자발적¹⁾ 취업 규모는 51.5%, 비자발적 규모는 48.5%

< 고용형태별 자발적 및 비자발적 취업선택 구성 >

(단위: 구성비, %)

| | 고용형태별 취업선택 구성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|
| | 임금 근로자 | 정규 | 비정규 | 한시적 | 기간제 | 시간제 | 비전형 | 파견 | 용역 | 특고 | 가정내 | 일일 | |
| 계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|
| - 자발적 | 68.3 | 77.6 | 51.5 | 57.3 | 56.8 | 47.1 | 37.1 | 58.4 | 46.7 | 51.5 | 34.6 | 8.3 | |
| - 비자발적 | 31.7 | 22.4 | 48.5 | 42.7 | 43.2 | 52.9 | 62.9 | 41.6 | 53.3 | 48.5 | 65.4 | 91.7 | |

- o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사유는 근로조건에 만족(42.1%), 안정적인 일자리(28.0%) 등의 순
 - 자발적 비중이 높은 한시적(57.3%), 파견(58.4%)의 경우 ‘근로조건 만족’이, 특수고용형태(51.5%)의 경우 ‘노력한 만큼 수입 보장’이 제 1사유
- o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당장 수입이 필요(65.2%),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 없음(15.5%), 전공·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음(3.9%) 등의 순
 - ‘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’, ‘학업, 교육훈련, 취업준비 위해’ 등 경력개발·상승형 동기가 6.9%에 불과하여 막다른 일자리 가능성 시사

□ 근로조건 격차

- o 자발적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87.1%;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4%, 자발적 비정규직의 62%

< 시간당 임금 비교 >

(단위: 원, %)

| | 정규직 | 비정규직 | |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평균 | 자발적 | 비자발적 |
| 시간당 임금 | 9,590(100) | 6,810(71.0) | 8,353(87.1) | 5,172(53.9) |

1) 금년 경찰부가조사부터 비정규직 선택동기 조사 개시 : 지난주 일자리 형태로 일한 것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확인하고 근로조건 만족, 당장수입이 필요해서 등 10가지 중 주된 사유를 선택

- 근로복지 수혜율은 자발적 및 비자발적 비정규직 사이에 6~7배의 차이가 있음

| 구분 | 정규직(%) | 비정규직(%) | |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
| | | 전체 | 자발적 | 비자발적 |
| 퇴직금 | 67.9 | 30.3 | 51.1 | 8.2 |
| 상여금 | 67.5 | 27.7 | 47.2 | 6.9 |
| 시간외수당 | 53.9 | 21.5 | 35.8 | 6.4 |
| 유급휴가 | 55.0 | 23.1 | 38.6 | 6.7 |

- 사회보험가입율도 자발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 간 3배 이상 차이

| 구분 | 정규직(%) | 비정규직(%) | | |
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|
| | | 평균 | 자발적 | 비자발적 |
| 고용보험 | 64.7 | 36.3 | 56.3 | 15.1 |
| 국민연금 | 76.1 | 38.2 | 59.3 | 15.8 |
| 건강보험 | 76.1 | 40.0 | 61.3 | 17.4 |

□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주요 특성

- 일일(91.7%), 용역근로(53.3%), 시간(52.9%) 등에서 비자발적 비중 높음
- 규모 : 비자발적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81.2% 집중, 자발적은 54.0%

< 사업장 규모별 자발적, 비자발적 비정규 비중 > (단위: 천명, %)

| | 전체 | 5인미만 | 5~9인 | 10~29인 | 30~99인 | 100~299인 | 300인이상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비정규직 전체 | 5,457 (100.0) | 1,436 (26.3) | 992 (18.2) | 1,235 (22.6) | 992 (18.2) | 432 (7.9) | 369 (6.8) |
| 자발적 | 2,809 (100.0) | 482 (17.2) | 371 (13.2) | 663 (23.6) | 671 (23.9) | 325 (11.6) | 297 (10.6) |
| 비자발적 | 2,647 (100.0) | 954 (36.1) | 621 (23.5) | 572 (21.6) | 321 (12.1) | 107 (4.0) | 72 (2.7) |

- 성별 : 비자발적은 남성 52.4%, 여성 47.6%, 자발적은 남성 46.9%, 여성 53.1%
- 학력 : 비자발적은 고졸이하가 85.9%, 자발적은 57.5% 차지
- 연령 : 비자발적은 40대(27.9%), 30대(20.0%), 50대(19.9%) 등의 비중 순, 자발적은 30대(30.4%), 20대(26.8%), 40대(20.9%)의 순
- 직종 : 비자발적은 단순노무(38.0%), 기능원(20.4%), 서비스 종사자(13.0%)가 대부분, 자발적은 사무 종사자(20.7%), 단순노무(16.4%), 기술공(13.7%), 전문가(12.3%) 등의 비중 순
- 업종 : 비자발적은 건설업(24.7%), 도소매음식숙박(21.5%) 사업서비스업(12.9%) 등의 순, 자발적은 도소매음식숙박업(17.1%), 사업서비스업(16.9%), 제조업(14.5%) 등의 순

3. 정책적 시사점

- ① 조사 이래 비정규직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도·소매·음식·숙박업(141천명), 건설업(52천명) 등에서의 감소에 주로 기인
 - 고용구조의 개선보다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
 - 기간제 감소, 공공 및 사업지원서비스 중심의 기간제·용역 등 증가는 고용의 외부화(직접고용감소·하청 등 간접고용확대) 확산추세 반영(추가적인 패널조사 및 분석 예정)
 - 여성·고령자·저학력·단순기능 등에 비정규직 집중,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혜율 등 격차 지속은 여전
 - * 최근 일부에서 비정규직보호대책의 강화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목표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 부족 (별첨 2 검토자료 참조)
- ②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 및 인적 특성(경향성) 확인
 - 40대, 고졸이하, 일용·용역·기간제, 건설·도소매음숙업, 소규모 사업장 등
 - * 비자발성 및 근로조건 격차는 연령, 학력, 사업장 규모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·비정규직은 근로빈곤층(working poor) 형성 가능성
- ③ 차별화된 비자발적 비정규직 정책의 개발 및 체계화 필요

4. 향후 대응 방향

- 고용형태 다양화 및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여건 조성·촉진
 - 비정규직 보호입법 조속처리,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의 차질 없는 시행(차별해소·남용방지)
 - 불법파견·위장도급 확대 억제를 위한 파견 및 도급 판별 기준 명확화
 - * 법원판례, 검찰 판정기준 등을 참조하여 사례중심의 판별 기준 구체화 작업 추진
- 비자발·비정규 함정 탈출 및 유입방지 대책의 체계화
 - 저학력·중고령자·소규모사업장 등을 위한 특화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및 차별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
 - 취약계층 중심의 근로감독행정 혁신 완료,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조기 적용, 최저임금 현실화, 4대 보험 징수통합 등 대책 추진 시급

<별첨 1> ‘06년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및 임금 등 근로조건

○ 비정규직 특성별 분포

- △ 남성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0.4%, 여성은 42.7%
- △ 10대(71.7%)와, 60세 이상(69.0%)에서 비중이 높고 50세 이상 비중이 크게 증가
 - * ’06년 시간제 근로자 91천명 증가분 중 60세 이상이 43천명 차지
 - * 비정규직 중 50세 이상 비중 : 24.6(’02) → 24.2%(’03) → 23.3(’04) → 24.5(’05) → 26.8(’06)
- △ 중졸이하(55.5%) 등 저학력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나 최근 고학력화 추세 (’05년 대비 고졸이하 비정규직 123천명 감소, 대졸이상 97천명 증가)
- △ 가사서비스업(82.1%), 건설업(58.0%), 사업서비스업(54.2%) 등에서 비중 높음

○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수준은 6,810원으로 정규직(9,590원)대비 71.0% 수준

< 시간당 임금수준 >

(단위 : 원, %)

| 구 분 | 시간당 임금 및 격차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’01.8 | ’02.8 | ’03.8 | ’04.8 | ’05.8 | ’06.8 |
| 정규직 | 6,459 (100) | 6,874 (100) | 8,059 (100) | 8,670 (100) | 9,171 (100) | 9,590 (100) |
| 비정규직 | 5,152 (79.8) | 5,533 (80.5) | 5,767 (71.6) | 6,377 (73.6) | 6,462 (70.5) | 6,810 (71.0) |
| 전 체 | 6,108 | 6,507 | 7,313 | 7,822 | 8,179 | 8,602 |

*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(3개월 평균) 수준은 정규직의 62.8%(’06년)

○ 근로복지 및 사회보험 수혜율도 증가추세이나 정규직의 1/2 수준 하회

< 근로복지 수혜율 >

(단위 : %)

| | 2005. 8. | | | | 2006. 8. | | | |
|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
| | 퇴직금 | 상여금 | 시간외 수당 | 유급휴가 | 퇴직금 | 상여금 | 시간외 수당 | 유급휴가 |
| ○ 정 규 직 | 68.6 | 67.4 | 56.6 | 58.0 | 67.9 | 67.5 | 53.9 | 55.0 |
| ○ 비정규직 | 28.8 | 25.5 | 21.1 | 22.7 | 30.3 | 27.7 | 21.5 | 23.1 |

< 사회보험 가입률 >

(단위 : %)

| | 2004. 8. | | | 2005. 8. | | | 2006. 8. | |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
| | 고용보험 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 고용보험 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 고용보험 | 국민연금 | 건강보험 |
| ○ 정규직 | 61.5 | 72.5 | 73.8 | 63.8 | 75.7 | 75.9 | 64.7 | 76.1 | 76.1 |
| ○ 비정규직 | 36.1 | 37.5 | 40.1 | 34.5 | 36.6 | 37.7 | 36.3 | 38.2 | 40.0 |

< 교육 및 훈련 참여율 (%) >

| 정규직 | 비정규직 | 한시적 | 단시간 | 파견 | 용역 | 특수 고용 | 가정내 | 일일 |
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
| | | 기간제 | | | | | | |
| 31.2% | 22.2% | 23.7% | 11.3% | 39.3% | 14.5% | 46.0% | 8.0% | 2.4% |
| | | 23.8% | | | | | | |

<별첨 2> 비정규직 보호강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저하 주장 검토

◇ 비정규직보호대책의 강화가 노동시장 보호막으로 작용하여 비정규직 감소를 초래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목표달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일부의 주장 (동아일보 11.20 10면,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인용)

- 비정규직 보호입법 및 정책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 보호강화를 일자리 창출 저하의 주원인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
- 비정규직 감소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실증적 근거도 부족
 - ① '03년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의 급격한 증가에도 일자리는 감소
 - * '03년 취업자수는 '02년 대비 30천명 감소, 비정규직은 77만명 증가
 - ② 비정규직의 감소에 불구하고 임금근로자(정규 + 비정규)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, 비임금근로자(고용주 및 자영업자) 규모의 감소 추세가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
 - * 최근 자영업 부분의 구조조정 진행과 경기침체로 인한 창업 등 위축으로 비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 이는 취업자 수 증가에 영향

< 전년대비 일자리 수 증감 추이 (천명) >

| 구 분 | 2002. 8 | 2003. 8 | 2004. 8 | 2005. 8 | 2006. 8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취업자 | 485 | -97 | 256 | 465 | 317 |
| 비임금근로자 | -5 | -215 | -181 | 82 | -66 |
| 임금근로자 (비정규직) | 489 (204) | 119 (767) | 436 (788) | 384 (88) | 383 (-26) |

- ③ 기간제(△6천명)가 감소하고 공공 및 사업지원서비스 중심의 기간제 근로자(91천명), 용역근로(68천명) 등이 증가한 것은 고용의 외부화 추세를 시사
 - * 기간제는 공공행정(30천명), 교육서비스(22천명) 등 업종에서 증가, 용역은 사업지원서비스(64천명)가 증가분의 다수를 차지